

국회 앞 타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촛불

✎ 김한주 기자 | ⓒ 승인 2020.12.14 20:25

민주노총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참담”

민중공동행동 대표 “산재는 구조적 살인”

참여연대 대표 “죽음의 외주화 멈춰야”



14일 저녁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김한주 기자

노동, 시민사회, 종교계가 14일 저녁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혔다.

앞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지난 1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14일 저녁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김한주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민주주의 촛불이 타올랐다. 지금은 생명과 안전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비록 9명으로 집회가 제한됐지만,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수만, 수십만의 촛불이 광화문 네거리를 메웠을 것이다. 국회는 유족과 노동자, 시민사회, 종교계가 바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구조적 살인이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람이 죽어도 벌금 오백만 원도 받지 않는다. 안전조치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싼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는 “열악한 현장에 노동자가 기계에 말리고, 떨어지고, 중독돼 죽어간다. 우리는 이를 멈출 답을 안다. 안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이 조금 더 안전에 투자하면, 외주화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지금은 사라진 사람들이 우리와 이 여의도 거리를 걸었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안전을 만들고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촛불집회엔 송경용 생명안전넷 대표, 이상윤 보건의료단체 대표, 지몽 스님, 김영주 목사가 참여했다.



14일 저녁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은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다. 참담하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당대표도 제정을 약속했지만 끝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연내 입법을 위해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한주 기자 hanjukim25@gmail.com